社 說

참여와 관심으로 서야할 학생회

— 양캠퍼스 학생회 선거를 바라보며

지난주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의 합동유세가 시작되면서 양 캠퍼스의 총학생회 선거가 본격화 됐다. 수원캠퍼스의 경우 지난주 부터 합동유세가 시작돼 내일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며, 서울캠퍼스도 지난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내일부터 후보자 합동유세가 시작된다.

그러나 올해의 선거는 예년의 선거에 비해 그 열풍이 냉각되다 못해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극에 달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회의 기초조직인 학과에서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캠퍼스 일부학과에서는 학회장선거를 위하여 휴강을 하는등 선거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투표율이 50% 도 미치지 못하는 학과가 많고, 수원캠퍼스 모학과의 경우 학생들의 참여가 현저하게 낮아 학회장선거를 무기한 연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학과 뿐만 아니라 각 단과대 학생회장선거, 더 나아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수원캠퍼스의 경우 총학생회장 후보에 단일후보가 나서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총학생회장 후보는 전년도 총학생회 정책에 대하여 비판하고 이에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대결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총학생회에서 내세우는 단일후보만이 등록해 예년의 열기는 찾아보기 힘든 상태다.

이러한 현상에는 80년대 이후 학원이 사회개혁의 주체자로서 자리매김하는 정치적상황이 크게 작용돼 왔으나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정치에대한 무관심이 커졌으며, 이로인해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가 크게 줄었다는 원인을 분석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극심한 취업난이 학생들을 도서관으로만 몰고 있어 집단주의보다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해 진다.

학생회는 향후 1천간 학생을 대표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펼쳐나가는 명실상부한 학생들의 대표기구다. 이러한 대표기구를 선출하는 선거에서부터 진정한 주체자인 학생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어찌되겠는가. 아무리 정치적 무관심이 만연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다 하더라도 아직 한국적 상황에서 학생회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처음부터 유권자가 감시자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면 선거에 임하는 당사자들도 공약에 소홀하게 되고 이는 곧바로 내년 학생대중의 대표기구로서 임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유세장으로 향하는 작은 정성, 투표장에서 행사하는 한표가 학생대표를 명실상부한 대표기구로 만들 수 있다.

민족 공동체적 자세 아쉽다

— 북한 핵관련 회담을 보며

요즘 북한—미국의 관계가 신상치 않다. 대북한 핵사찰 수용 요구에 미국의 불편한 심기가 매스컴에 그대로 드러난다. 미국은 탈냉전 이후, 그간의 냉전 정책, 사회주의 붕괴정책, 도덕외교에서 이른바 실리위주의 '확대정책'으로 옮겨가고 있으나, 북한을 대하는 태도는 예외이다. 핵확산금지조약거부국인 북한을 향한 미국의 외교는 냉전시대의 방법인 고립화와 군사적 제재까지 고려하고 있다. 도덕외교이자 봉쇄외교이다. 즉 명분 위주의 외교이다.

경제적이자 군사적 제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북한은 풍꼰등화로 접어든 셈이지만, 오히려 여유있게 대미 외교를 주도해 가는 인상이다. 북한이 내세운 거부근거는 '자주'와 '사회주의 고수'라는 표면적인 이유 뒤에, 미국을 통한 북한의 생존권 문제 해결이 숨겨져 있다.

미국의 도덕외교이자 봉쇄정책에 맞서는 북한은 실상 에너지 부족 현상과 무역침체가 심각하다. 얼마전 2주간 북한을 갔다온 헤이즈가 평양 중심지에서 정전과, 함흥항에서 컨테이너 화물선 한 척만 정박해 있는 기괴한 현상을 경험하였다 한다. 또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팀스피리트 훈련이 주는 위기감이나 남한에 설치되어 있을 지 모르는 핵위협과 준전시 상태에도 미국이 한국의 모든 것을 전쟁물자로 이용할 수 있는 조약은, 북한사회의 위기감 조성에 일조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이 내 놓은 것이 뱃심 좋은 외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득력 있게 제기되는 것은 일괄타결이다. 미국은 북한에게 미국의 명예와 도덕의 징표인 사찰수용을 받아내고, 북한은 미국에게 북—미수교와 고립의고 탈출을 받아내는 것이다. 현상황에서 상호간 원하는 것을 얻자는 것이다. 우리는 이 현실적인 주장에 동조하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평화적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아울러 우리가 되짚어볼 문제는 한국의 입장이다. 사실 현 핵문제는 지난해 남북합의서 채택 후 대표급 접촉인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제3차 대표접촉에서의 핵심논의였다. 한반도 핵문제를 남—북한이 평화적, 화해적, 민족주체적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호핵사찰 이전에 시범사찰'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한국이 범여과 없이 수용, 제기하여 남—북의 화해무드가 단지 상징적 선언으로 되고 말았다.

또한, 지금의 핵사찰을 둘러싼 한국의 입장 역시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북—미회담) "대화가 실패했을 경우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학 것이라 밝혔다. 핵문제는 분명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자주통일에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의 주체적, 민족적 견해가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님 수 없다.

지금이라도 우리정부는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를 갖고 핵문제 해결에 임해야 할 것이다.

대학교육의 수혜자는 '전 사회'

사론 민주당 김원웅의원의 '교육백서'

최근 대학교육에 대해 특히 사립대학교육에 관한 비판적인 시각이 강하다. 그러면 왜 국내 사립대학들의 위상이 왜곡되었을까. 우리 사립대학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민주당의 김원웅 의원이 이번에 펴낸 '교육백서—사립대학 재정실태 분석/문제점과 정책대안'은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구조가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책은 크게 교육의 목적과 대학교육,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교육환경 실태 분석, 재정구성 실태,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재산보유 현황 및 운영실태, 교육부의 감사를 통해 본 사학재정운영의 문제점 등 총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고는 이 책에서 다루어진 부분들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자 쓰여진 것이다. (편집자註)

'교육의 목적은 학교교육을 위한 사설 뿐만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도 항상 강력히 실현되어야 한다'(교육법 제81조)

교육은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를 국가발전과 민족번영에 적극 이바지하는 동량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대학교육이 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 교육과는 달리 대학교육은 사회를 이끌 지도자, 전문지식과 전문기술을 겸비한 간부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학중 우리나라의 경우 국·공립대학(25개)에 비해 사립대학이 1백2개로 월등히 많으며 이는 곧 사립대학의 위기는 우리나라 대학의 위기로 연결되는 것이다.

사립대학 학교법인이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교육부 소관 법인으로 정부에 의해 교육을 위임받은 공교육기관이라 했을 때, 대학교육은 학교법인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닌 교수, 학생, 직원이 자율적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정부의 경우 교육의 수혜자는 피교육자인 학생뿐만이 아닌 국가사회 전체가 그 수혜자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당연한 의무에 속한다.

이는 사립대학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과 같은 서구 선진자본주의에서는 정부가 국·공립대학뿐 아니라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그것이 하나의 시대적 추세로 되고 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금년초 김영삼 대통령은 "대학교육개혁을 제1의 과업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교육재정 GNP 5%확보'를 공약하기도 했으나 지금도 경제기획원과 다른 교육단체들은 이 GNP 5%에 대해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서 갈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재정이라는 개념은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방 정부의 지원을 의미하는 공부담 공교육비로 협의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경우 93년 현재 교육재정은 GNP대비 3.7%이며, 따라서 98년까지 GNP가 매년 7%씩 올라간다고 가정할 때 5년동안 교육예산은 연평균 약 13%씩 더 확보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사회복지가 잘 이루어진 선진국일수록 교육에 대한 정부와 사회단체의 재정지원이 너무 적다는 것은 교육재정의 부족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비명하에 학생들에게 전가되며 이는 각 사립대학의 등록금에 대한 의존율이 91년 현재 75.68%에 이르는 것으로 알수 있으며 지난 3년간 평균 등록금 인상율이 10~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겠다.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 기준령 제5조를 보면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80%이상에 해당하는 액을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연간운영경비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교육법 14조 2항에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학법인이 부담한 법인전입금은 사립대학의 연간운영수입총액 중 13~15%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며, 법인의 재산이 되는 건물공사, 토지매입의 경우 법인에서 충차한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성회비를 비롯한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제단 전입금에 대해서 대학법인은 스스로를 "영세하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나 92년 현재 대학법인 중 실제로 적자를 본 법인은 하나도 없으며 1백억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낸 법인이 있을 정도로 흑자경영을 하고 있다.

교육부의 감사지적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법인의 재산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 법인의 자의적인 운용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과 허가도 받지 않고 재산을 매각하는 등 관할청인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재대로 안되고 있다는 점이 주된 문제로 제기되었다.

또한 관할청인 교육부의 행정능력 부재도 문제이다. 지금

등록금, 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현황과 합계액대비 구성비

1992년 현재(단위:천원, %)

대 학	등 록 금	전 입 금	기 부 금	국고보조	총 계
강남대	8,537,934(96.41)	197,724(2.23)	72,133(0.81)	48,463(0.55)	8,856,254
경기대	22,321,891(96.69)	502,795(2.18)	118,425(0.51)	142,264(0.62)	23,085,375
경희대	44,360,270(86.22)	4,479,488(8.71)	1,990,927(3.87)	617,068(1.20)	51,447,753
광운대	12,509,880(80.57)	2,516,162(16.21)	495,111(3.19)	3,986(0.03)	15,525,139
고려대	53,530,377(81.47)	5,531,601(8.42)	4,668,981(7.11)	1,968,116(3.00)	65,699,075
대구대	33,833,254(95.76)	122,184(0.34)	529,331(1.50)	847,764(2.40)	35,332,533
동아대	38,348,494(90.20)	3,303,429(7.77)	549,845(1.29)	314,759(0.74)	42,516,527
동의대	18,031,934(92.23)	560,000(2.86)	386,126(1.98)	572,654(2.93)	19,550,714
목원대	11,211,630(97.79)	229,543(2.00)	23,214(0.20)	254(0.01)	11,464,641
수원대	15,417,587(91.68)	1,135,694(6.75)	241,415(1.44)	22,634(0.13)	16,817,330
아주대	18,484,609(79.32)	3,938,982(16.90)	727,539(3.12)	153,433(0.66)	23,304,963
연세대	61,584,401(80.06)	4,456,631(5.79)	9,921,482(12.90)	959,301(1.25)	76,921,815
영남대	50,215,399(90.01)	4,483,505(8.04)	497,982(0.89)	593,247(1.06)	55,790,133
전주대	16,488,889(88.37)	1,621,482(8.69)	120,272(0.65)	427,472(2.29)	18,658,115
청주대	25,643,697(96.43)	407,658(1.53)	345,103(1.30)	195,521(0.74)	26,591,979

1% 안팎의 정부지원 대폭 확충 절실

대학 공금의 사적 이용 근절되어야

이같은 교육재정의 부족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비명하에 학생들에게 전가되며 이는 각 사립대학의 등록금에 대한 의존율이 91년 현재 75.68%에 이르는 것으로 알수 있으며 지난 3년간 평균 등록금 인상율이 10~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겠다.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 기준령 제5조를 보면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80%이상에 해당하는 액을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연간운영경비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교육법 14조 2항에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학법인이 부담한 법인전입금은 사립대학의 연간운영수입총액 중 13~15%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며, 법인의 재산이 되는 건물공사, 토지매입의 경우 법인에서 충차한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성회비를 비롯한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제단 전입금에 대해서 대학법인은 스스로를 "영세하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나 92년 현재 대학법인 중 실제로 적자를 본 법인은 하나도 없으며 1백억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낸 법인이 있을 정도로 흑자경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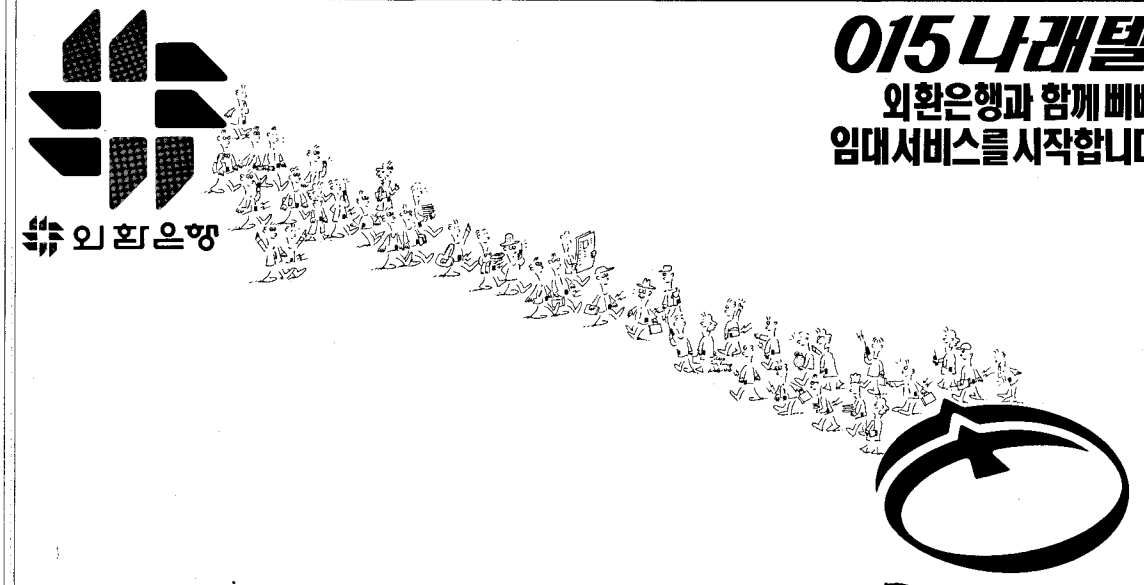
교육부의 감사지적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법인의 재산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 법인의 자의적인 운용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과 허가도 받지 않고 재산을 매각하는 등 관할청인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재대로 안되고 있다는 점이 주된 문제로 제기되었다.

또한 관할청인 교육부의 행정능력 부재도 문제이다. 지금

〈논설부〉

'난파선'

신세대 생활삐삐—015나래텔



015나래텔
외환은행과 함께 삐삐 임대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외환은행

삐삐가 꼭 필요하지만 비용때문에 망설이십니까?
그렇다면 015 나래텔이 외환은행과 함께 실시하는 삐삐 임대서비스를 기대해 주십시오.
삐삐 구입시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한차원 높은 서비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015나래텔 임대서비스—
고객에게 이익을 돌려 드립니다.

- 종래가 구입삐삐 가입비용(약 16만원)과 당일이 67,900원으로 최신형 호출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한차원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요금보다 월사용료는 3%, 임대보증금은 22% 가 절약됩니다.
- 동종기종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총 이용요금은 1년 및 2년 임대는 53,000원, 3년 임대는 59,000원이 절약됩니다.
- 보증금(163,500)은 임대해지시에 돌려 드립니다.
- 초기임대 계약기간 만료후에는 재임대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월 임대료가 500원으로 경감됩니다.

■ 가입비용

구 분	1년	2년	3년
보증금		₩63,500	
신청비		₩4,400	
월 세		₩7,900	
인지대	₩12,000	₩15,000	₩10,500

- 위사용료는 위임대료 포함 금액입니다.
- 보증금은 계약해지시 반환됩니다.
- 휴대전화서비스 가입시는 위 ₩4,000만 공 가입됩니다.
- 계약기간 재임대시 위사용료는 ₩10,000만입니다.

■ 삐삐 임대시와 구입시 가입자 비용비교

항 목	임대이용시	구입이용시
가입	삐삐구입비	없음	약 ₩130,000
비용	보증금	₩63,500	₩28,500
	접수비	₩4,400	₩4,400
	월 세	₩7,900	₩162,900
	위사용료	₩10,500 (3년기준)	₩9,500

■ 선납 할인제도

개인비용과 3,6,12개월분 요금을 선납하시는 경우 다음 처럼 인하됩니다.

선납기간	3개월분	6개월분	12개월분
할인율	2%	3.5%	6%
선납금액	₩30,870	₩60,750	₩118,440

■ 015나래텔 임대서비스는 이런 분들에게 더욱 경제적입니다.
- 적은비용으로 한차원 높은 서비스를 희망
- 타수의 수신기를 편리하게 하는 방안을

나래이동통신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184 4 TEL 3630-1 4 FAX 363 4477

* 외환은행 서울, 경수인 178개 영업점에서 청약하십시오.